

동아일보의 신탁통치 왜곡보도 연구

김동민*

동아일보는 해방 직후 시기에 친일파 지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한국민주당(한민당)의 기관지 역할을 하면서 왜곡보도로써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선동하여 여론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다. 이는 미 국무성의 방침과 달리 신탁통치를 반대했던 미군정 당국의 견해를 대변하는 동시에 즉시독립을 갈망하는 민중의 정서를 이용하여 친일파 집단의 정체성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왜곡하면서 반탁=반공=반소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것은 과오에 의한 오보가 아닌 의도적인 허위·왜곡보도였다.

그 결과 반탁=반소=반공=애국, 친탁=친소=용공=매국의 공식이 성립되었다. 친일파들이 애국자로 둔갑하고, 반대로 3상회의의 결정을 수용하여 민주정부 수립을 추진한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는 매국노로 매도되었다. 이로써 토지개혁과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실종되었다. 그것을 비꼰 민중들도 반탁선동에 매몰되어 현안의 과제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 분위기에서 친일파들은 미군정의 도움을 받아 단독정부 수립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온전히 장악하였다. 친일파들이 한국사회의 주류가 되어 새 역사의 출발을 왜곡시켜 놓은 것이다. 나치독일에 협력했던 지식인들을 철저하게 숙청함으로써 새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놓은 프랑스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동아일보는 태도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격변기에 나타나는 정론지(政論紙)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객관성과 중립성, 불편부당을 표방하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독자를 확보하려 했던 대중지(大衆紙)가 출현하기 직전, 정파적 견해를 대변하면서 정치적 목적의 선전과 선동을 일삼던 정치신문의 모습인 것이다.

주제어: 신탁통치, 동아일보, 정론지, 왜곡보도, 역사왜곡

1. 문제의 제기

역사학계에서는 해방 직후의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특히 당시 신문들의 반탁운동 선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에 비해 언론학계의 언론사 연구자들의 관심은 매우 미미하다. 신문의 왜곡보도가 역사왜곡으로 이어진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 비해 관련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정용욱은 동아일보의 1945년 12월 27일자 머릿기사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을 “국내에 반탁운동 열기를 몰고 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정용욱, 2003, 55쪽).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이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한 미군사령부가 결정서를 입수하기 이틀 전에 나온 관측보도로서, “삼상회의 당시 미·소 양측 입장과 주장을 정반대로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서 내용과 전혀 다른 왜곡보도였다”는 것이다(정용욱, 2003, 56쪽). 또 “이 기사는 남한에서 반탁운동을 격화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며칠간 삼상회의와 그 결정 내용에 대한 국내 신문의 보도 태도와 보도 방향을 결정했다”고 진단했다(정용욱, 2003, 56쪽).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조선의 운명은 조선민족의 자주적 결정에 달려 있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전리품이 되어 종전 이전부터 그들의 논의에 내맡겨져 있었다. 가장 적극적인

* 동아대학교 초빙교수(dmkim2010@hanmail.net)

구상을 한 나라가 미국이었다. 영국은 제국주의 시대의 전개 이후 보유하고 있던 식민지의 항배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소련은 독일을 대적하면서 유럽전선을 도맡다시피 하여 여유가 없었던 데 비해 미국은 비교적 여유도 있고 주로 일본은 대적하면서 일본의 식민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찌감치 식민지, 특히 조선의 전후 처리에 대해 신탁통치를 구상하고 있었다. 루즈벨트의 구상은 영국의 반대에 부딪히고 소련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 조선문제는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3상회의로까지 미뤄졌다.

한편 일본이 1931년 만주 침략에 이어 1936년 중국 본토에서 중일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일제 식민치하의 우파 민족주의 진영은 독립의 꿈을 포기하고 거의 예외 없이 부일협력의 길로 들어섰다.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은 이들로 하여금 일본의 승승장구를 믿어 의심치 않게 만들었다. 해방이 되자 이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토지개혁과 친일파 처단을 기본으로 하여 독립국가 건설이 해방정국의 의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조선인 총독부 관리들을 다시 등용하고 친일파 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았다. 친일신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복간도 도왔다.

그 배경에서 동아일보는 친일파 지주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한국민주당(한민당)의 기관지 역할을 하면서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선동하여 여론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다. 친일파 청산과 토지개혁(재분배)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켜 정치적 경제적 입지를 회복하려는 의도였다. 박명림은, 모스크바 3상회의와 그 결정이 완전히 왜곡되게 알려져 벌어진 ‘찬·반탁운동’ 등 격렬한 제반 움직임이 해방 3년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모멘트 중의 하나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박명림, 1989, 31쪽). 미국(군정 당국)은 3상회의의 핵심적 합의를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이 아닌 ‘소련의 제의에 의한 신탁통치 결정’이라고 왜곡하여 인식시킴으로써 즉각적 독립을 희망하는 조선 민중의 즉자적·심정적·정의적 민족주의 감정의 격렬한 폭발을 유도함으로써 반탁=독립=반소=반공(반좌익)=애국, 3상회의 결정 지지=찬탁=식민지 연속=친소=공산주의=매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창출 해냈다는 것이다(박명림, 1989, 31쪽).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가 아닌 남한에 대한 확실한 점령 정책 및 친미정권 수립을 목표로 했던 미군정 당국과 친일세력의 입지 회복이라는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분위기 반전을 꾀한 한민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고, 동아일보는 그 맥락에서 한민당의 정치적 견해를 대변하는 정론지로서 3상회의 결정을 왜곡하여 민중의 감정을 폭발하게 하는 데 선봉에 섰다.

동아일보는 루즈벨트가 주도하는 미 국무성의 당초 신탁통치 방침과 달리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던 미군정 당국의 입장에 부응하는 동시에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왜곡하면서 반탁=반공=반소의 분위기를 조장했던 것이다. 3상회의 결정의 골자가 신탁통치가 아닌 민주적인 임시정부의 수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통치에 방점을 찍고 여론을 선동하였다. 이것은 과오에 의한 오보가 아닌 의도적인 허위·왜곡보도였다.

이 논문은 동아일보를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한 보도로써 독자를 확보하려고 하는 대중지 이전 시기의 전형적인 정론지(政論紙)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3상회의의 결정을 왜곡보도한 궤적을 추적하여 그 정론지의 역할을 수행한 동아일보의 왜곡보도가 민족사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한국언론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해방 이후 현대사 연구에 인색한 편이다. 따라서 미군정 시기의 언론현상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매우 드물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언론사 연구의 태두라 할 수 있는 최준 교수는 신탁통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최준, 1960, 353~354쪽).

“北緯38度線을 경계로 한 소련軍政下の北韓은 共產黨 一色으로 되었고 以南의 美軍政 아래에서는 온갖 部門에서 左右가 對立한 채로 混沌과 騷亂 속에서 1945년도 저물어 갔다. 12월 2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美·英·蘇 3개국 外相會議에서는 한국에 대하여 5개년간의 信託統治案이 決定되었다. 이 報章가 한번 전해지자 국내에서는 左右를 막론하고 이를 決死反對하지는 輿論으로 물 끓듯 했다. … 朝鮮共產黨에서도 데모를 새해 1월 3일 거행하기로 예정하고 데모 隊員들을 동원하던 중 外相會議 決定을 支持하라는 平壤으로부터의 指令을 받은 후 태도가 돌변하여 모스크바 3相會議 決議를 支持하는 聲明書를 발표하고 한편으로는 3相會議 支持데모를 따로 단행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共產黨에 대한 민족적 감정은 극도로 惡化되어 갔다. 종래의 左翼紙들도 共產黨의 聲明에 따라 3相會議 支持 즉 5개년 信託統治案을 支持하여, 新聞界 역시 政黨과 똑같이 反對派와 支持派로 兩分 對立되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보지 못하던 強力 熾烈한 左右의 2大 主流은 信託統治問題를 에워싸고 熱烈한 筆鋒의 불꽃을 亂射케 되어 이를 支持하는 左派紙는 反對紙를 『反動新聞』이라 불렀고 反對紙는 또한 이를 支持하는 新聞을 『賣國新聞』이라고 서로 應酬 反覆하여 韓國新聞史上 처음으로 新聞界는 左·右對立의 兩勢力으로 區分되는 뚜렷한 現象을 露呈하였다.”

해방 직후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 분야뿐 아니라 역사 연구 일반이 일천했던 시기에 쓴 글이기에 상황인식이 뒤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도 않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은 신탁통치가 핵심이 아니었다. 따라서 신문계가 신탁통치문제로 대립하게 되었다는 인식도 잘못된 것이다. 누군가 민주정부 수립에 방점을 찍은 3상회의의 결정을 왜곡하면서 반탁운동을 선동했던 것이다.

언론학계의 신탁통치관련 보도에 대한 거의 유일한 연구는 김민환 교수의 저서다(김민환, 2001). 그는 신탁통치안에 대한 보도를 공산주의 계열의 신문과 진보주의 계열의 신문, 그리고 자유주의 계열의 신문으로 분류하여 주장하는 바를 비교하였다.

먼저 ‘공산주의 계열 신문의 신탁통치안에 대한 주장’에 대한 내용을 보자. 김민환은 “공산당 기관지인 《해방일보》와 《노력인민》은 신탁통치야말로 한국이 통일된 민주주의 독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진보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했다(김민환, 2001, 62쪽). 이것은 정확한 반영이 아니다. 공산주의 계열 신문들이 지지한 것은 신탁통치가 아니라 3상회의의 결정이었다. 3상회의의 결정은 신탁통치가 핵심 내용이 아니었다. 따라서 신탁통치를 가장 현실적이고 진보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어서 인용한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방일보》는 박헌영의 보고 연설을 인용해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의는 식민지 민족해방과 독립을 보장하는 유일하게 옳은 국제적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조선문제가 이러한

원칙으로 해결된다면 혁명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도 평화적 방법으로 민주주의와 독립이 달성될 것”(1946년 4월 29일자 ‘박동무의 연설’)이라고 주장했으며, 《노력인민》은 “모스크바 삼상결정은 조선에 대한 10년간의 위임통치를 예정한 미국안이 부정되고 소련안이 중심이 되어 결정된 것”으로 “조선민족을 위하여 참으로 유리한 진보적 결정”(1947년 11월 20일자 ‘파쇼희랍화하려는 조국을 구하자’)이라고 강조했다(김민환, 2001, 62~63쪽). 신탁통치가 아닌 3상회의의 결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력인민》 기사를 보면, 미국의 신탁통치안 대신에 소련의 안이 관철된 3상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신탁통치안을 가지고 회의에 임했던 미국이 소련의 임시민주정부수립안에 밀려 3상회의의 결론은 소련측이 준비한 안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진보주의 계열 신문의 신탁통치안에 대한 주장’을 보자. 김민환 교수는 “1946년 1월에 들어서면서 진보주의 신문들은 한결같이 신탁통치를 지지하고 나섰다”면서 “신탁통치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이들은 대체로 두 가지를 들었다”고 정리했다(김민환, 2001, 67쪽). 첫째는 국토를 미소가 분할하여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된 독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국제노선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율적으로 통일전선을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3상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유일한 관건”(《조선인민보》 1946년 5월 24일자 사설 ‘건국과 모략’)이라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여기서도 이 신문들이 신탁통치를 지지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여긴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로 들며 인용한 《조선인민보》 사설에서 이 신문들이 지지한 내용이 거론된다. 민주적인 임시정부 수립이 그것이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핵심은 신탁통치가 아니라 임시정부의 수립에 있었다. 따라서 진보계열 신문들이 지지한 것은 신탁통치가 아니라 임시정부의 수립에 있었다는 단서가 포착되었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점을 확인하고, 동아일보가 왜곡보도로써 현실을 호도한 점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김민환 교수는 ‘자유주의 신문 계열의 신탁통치안에 대한 주장’에 대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통신에 접하자 이에 즉각 반발하였다”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를 소개하였다(김민환, 2001, 69쪽). 조선일보는 한국에 미·소·영·중 4개국 신탁통치위원회가 설치되며, 미소 양국은 남북조선 행정의 통일을 위하여 양군 당국 간에 회의를 개최한다는 3상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자 “독립을 다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다오 이 한마디의 말로써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세력에 대항하여 피를 흘리자”고 선동했으며(1945년 12월 29일자 사설 ‘죽음이냐 독립이냐’), 동아일보는 “신탁통치의 관리하에 기왓장으로 꾸물거리기보다는 차라리 독립 기치 하에서 옥으로 부서지자 함이 삼천만의 총의”(1945년 12월 30일자 사설 ‘瓦釜보다 옥쇄로’)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김민환, 2001, 69쪽). 역시 3상회의 결정의 내용을 신탁통치로 단정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상회의의 결정은 ‘미·소·영·중 4개국 신탁통치위원회’가 아니라 민주정부 수립을 의논할 ‘미·소 공동위원회’였다.

김민환은 “신탁통치안은 사실 미국이 제의한 것인데도 자유주의 신문들은 외신보도를 근거로 이를 소련이 제의한 것이라고 왜곡하였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김민환, 2001, 70쪽). 조선일보는 “미국측에서 카이로선언에 의하여 즉시 조선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도리어 소 측이 이와 같은 반대의 의사를 표”하였다고(1945년 12월 27일자 사설 ‘신탁통치를 배격함’) 주장했으며, 동아일보도 “대체로 미국은 카이로선언을 준수하여 국민투표에 의한 즉시독립을 승인하지는 것이며, 소련은 38선의 존속으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니 일국(一國)의 신탁관리로 하자는 것”(1945년 12월

28일자 사설 ‘민족적 모독—신탁 운운에 소련에 경고’이라며 탁치의 추진자가 소련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김민환, 2001, 70쪽). 이들은 처음에는 신탁통치안을 소련이 제의한 것으로 추정하여 비판했으나 곧 소련을 “우리에게 탁치를 강요하는 나라”(동아일보 1946년 5월 11일자 사설 ‘미소공위 결렬—反託御 自主를 재강조’)로 단정하여 소련을 비난했다는 것이다(김민환, 2001, 71쪽). 사실 이 신문들은 3상회의 결의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도 잘못 전달한 내용을 시정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소련을 비난하며 반탁을 선동하였다.

또 김민환은 “우파 신문들은 점차 반탁의 민족주의적 측면보다는 그 반공이데올로기로서의 유효성의 측면을 의식적으로 이용해 나갔다”(최상룡, 1988, 201쪽)는 최상룡 교수의 지적을 적절히 인용하였다. 김민환은 또 “우파가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투쟁과정에서 좌파를 오히려 반족적 분자로 몰아세운 이런 이념적 전치는 이후 집요하게 지속되었다”고 지적하였다(김민환, 2001, 72쪽). 다만 김민환의 연구에서는 3상회의의 결정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왜곡보도를 했는지, 그것이 민족사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에 대한 분석은 과제로 남겨놓았다.

본 논문은 동아일보가 친일파들로 구성된 한민당을 대변하는 정론지(政論紙)로서, 미군정 당국의 신탁통치 반대 견해를 반영하는 동시에 즉시독립을 갈망하는 민중의 정서를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보도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자행함으로써 친일파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 결과 민족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언론사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3. 신탁통치 논의의 전개과정

미국이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처음 거론한 때는 1943년 3월24일이었다. 이날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영국의 이든(Anthony Eden) 외상과의 회합에서 한국은 전후 신탁통치가 적절하다고 언급한 것이다(브루스 커밍스, 1986, 149쪽). 그러나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영국은 신탁통치 구상이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반대했다. 그 후 미·영·중 3국은 1943년 12월1일 열린 카이로 회담에서 “한인들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공표하였다. ‘적절한 시기에(in due course)’라는 표현이 문제였다. 이는 루즈벨트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서 즉각적인 독립이 아닌 다른 고려가 내포된 것이었다. 신탁통치였던 것이다. 루즈벨트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실시된 위임통치 방식이 피식민지를 특정 국가에 무기한 위임함으로써 사실상의 식민지가 됐다는 판단을 했다.¹⁾ 그래서 단일국가가 아닌 복수

1) 신탁통치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 2월의 파리강화회의에 이르게 된다. 승전국들 사이의 식민지 재분할이라는 같은 동기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이 때 이승만은 회의 참석이 거부되자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이 일본의 속박을 벗고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는데 한국이 완전한 정부를 수립하고 내치와 외교의 권리가 있을 때까지는 국제연맹 위임통치를 붙여서 보호를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보냈다. 1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동맹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도 외교활동의 맹점을 읽을 수 있다. 이승만은 나아가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일본 천황에게 “일본이 한국을 독립시키면 한국인의 감사와 우정을 취득할 것”이라는 독립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이승만은 결국 상해임시정부의 대통령직에서 탄핵을 받고 물러났다. 그런 이승만이 해방 후에는 친일파 지주집단이 주축이 된 한민당과 더불어 반탁운동을 주도하였다. 윤대원 (1990).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 한길사, 33.

의 나라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신탁통치를 거침으로써 자립 능력을 갖도록 한다는 구상을 창안한 것이다(김자동, 2010a).

미국이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구상한 표면적인 이유는, 루즈벨트의 판단대로 조선인들은 전쟁이 끝났을 때 즉 해방 독립 이후 스스로 통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론도 있었다. 망명단체인 한인군인가족친지협회의 간행물 『대표연주자』에 실린 글이다(커밍스, 1986, 151쪽).

“한국의 역사적 배경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구미인사들은 ‘그들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다. 한국은 오래된 국가이다. 북유럽의 조상들이 아직 가축을 걸치고 숲속을 다니며 무술(巫術)을 따르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자체의 정부를 갖고 있었으며 고도의 문명을 이룩하고 있었다”(1943년 4월24일).

미군정의 고문이었던 언더우드 박사도 조선인의 자치능력을 인정했다(리처드 E. 라우터백, 1948, 141쪽).

“한국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자기 자신에 맞추어 통치할 능력이 있다. 그들은 일본에 정복당하기 전 수세기의 독립과 주권을 가졌고, 그 역사는 중국만치 길며 일본보다는 훨씬 오래다. 물론 그들 앞에 곤란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정직한 또는 유능한 정부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는 없다.”

그러나 루즈벨트와 외교전략가들은 식민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압박 민중들이 즉각적인 독립회복에 대해 참을성이 없다는 정서를 파악하지 못했다. 루즈벨트는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까지 국가의 형태를 갖춘 경험이 없는 필리핀과 한국을 동일시하여, 알타에서도 한국은 40년 정도의 후견을 거쳐야 독립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김자동, 2010c). 그래서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한국인은 아직 독립정부를 행사 혹은 유지할 능력이 없으며 40년간의 후견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다(커밍스, 1986, 154~155쪽). 미국은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과 국무부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의 최초 창안자였으며, 그 기간도 처음에는 일제(日帝) 식민통치와 맞먹는 무려 40년의 장기간을 생각했다.

루즈벨트는 1945년 알타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의 비공식 토론에서 다시 스탈린에게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후견을 언급하면서 필리핀이 50년간의 후견을 필요로 한데 비해 한국은 20년 내지 30년간의 신탁통치를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신탁통치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을 것이며, 한인들이 자신의 정부를 만들 수 있다면 신탁통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커밍스, 1986, 156쪽). 1956년 뉴욕 타임즈가 공개한 알타회담의 전문에는 루즈벨트가 마지막으로 “적어도 5년 이상의 후견기간이 필요하다”고 후퇴했고, 이에 대해 스탈린은 다시 “더 짧을수록 좋지요” 정도로 대화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김자동, 2010c). 알타회담에서 신탁통치 문제는 연합국들의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포츠담회의로 미뤄졌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알타회담을 마친 후 3개월이 지난 1945년 4월12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루즈벨트의 사망과 트루먼 대통령의 등장은 약간의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루즈벨트가 소련과의 협조에 의해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려 했던 반면에 트루먼은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던 인물이었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소련과의 협의에 의한 신탁통치의 관철에서 군사적 점령을 병행 내지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후 미국이 소련의 동의를 얻어 줄속으로 38선을 획정하

후 남한을 점령하여 군정을 실시하게 됐을 때, 미군정 당국이 반소 반공 노선을 관철시키는 데 배경이 되었다.

1945년 7월22일 개최된 포츠담 회합에서도 식민지 처분에 관한 이해관계로 인해 신경전을 벌이다가 한국의 신탁통치 구상은 의제에도 올리지 못하고 모스크바 외상회의로 넘겨졌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 올린 미국의 한국 통일행정체제안(한국신탁통치원안)은 “미·영·중·소 4개국이 신탁통치체제의 최고권한자가 되어 유엔헌장 79조에 규정된 기본목적에 따라 행동한다” 등 4개안을 준비했고(1945년 12월 17일), 소련의 ‘미국측안에 대해 소련이 제출한 대안’은 “조선을 독립국가로서 재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조선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다” 등 4개안을 준비했다(12월 20일)(이정복·윤종일, 1994, 501~502쪽). 전문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미·소 대표단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제출한 메모랜덤(정일준, 1988, 156쪽)

미국측 초안 한국의 통일시정(45.12.17)	소련측 대안 한국에 관하여(45.12.20)
1. 미·영·중·소 4개국이 신탁통치체제의 최고 권한자 <i>administering authority</i> 가 되어, 유엔 헌장 76조에 규정된 기본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 2. 1인의 고등판무관 <i>a High Commissioner</i> 과 4개 신탁통치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 <i>Executive Council</i> 를 통해서 통치 권한과 기능을 수행한다. 3. 한국의 통일 행정 체제, 즉 신탁통치 체제에는 한국인을 행정관 <i>administrators</i> , 상담역 <i>consultants</i> , 고문 <i>advisers</i> 으로 사용한다. 4. 신탁통치 기한은 5년 이내로 하되 <i>within a period of five years</i> 필요하면 4개 신탁통치국간의 협정으로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1. 조선을 독립 국가로서 재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2. 이 정부의 수립을 원조하고 일정한 조치를 미리 정해 두기 위하여 미·소 양군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이 제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선의 민주주의적 제정당 및 제사회 단체와 협의한다. 이 위원회의 권고는 미·영·중·소 4개국 정부 앞으로 제출된다. 3. 공동위원회는 조선 임시 민주 정부와 조선의 민주주의 단체들의 참가 하에 조선개혁안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또한 최고5개년 <i>a period of upto five years</i> 간의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 <i>Опекса</i> 에 관한 협정안을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 4개국 정부에 제출한다. 4. 양 사령부간의 대표자 회의를 2주 이내에 소집한다.

미국과 소련이 각기 제출한 안을 가지고 논의한 결과, 즉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대체로 소련측 안이 관철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설치하고 가급적 속히 오랫동안 일본 통치로 말미암아 생긴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 교통 농업과 민족문화 발전의 필요한 모든 시설을 담책할 민주주의적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2. 조선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적당한 방책을 연구 조정하기 위하여 남조선 미국 점령군과 북조선 소련 점령군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다. 그 제안 작성에 있어서 공동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들이 작성한 제의안은 공동위원회 대표들의 정부가 최후 결정하기 전에 미소영중 각 정부의 참고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선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독립국가의 수립을 원조 협력할 정책을 작성함에는 조선임시정부와 민주주의 단체들의 참여하에서 공동위원회가 수행하되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개년 기간으로 4개국 후견의 협약 작성을 위하여 미소영중 제정부가 공동 참작하도록 조선임시정부와 협의하여서 제출되어야 한다.

4. 남북조선의 관련되는 모든 긴급문제를 고려하며 행정 경제의 항구적 균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2주일 안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군 사령부 대표회의를 소집할 것이다(재미한족연합위원회 편, 1948, 15쪽).

커밍스는 모스크바 회담의 결과에 대해 미국의 전시 계획을 뒤집어 놓은 타협적인 협정으로 변했으며, 한인들의 자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한인들이 후견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신탁통치 협정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한국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했다(커밍스, 1986, 284쪽). 그러나 이 협정은 주로 남한의 미군 사령부 및 한국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망가지고 말았다(커밍스, 1986, 285쪽). 하지는 1945년 10월 중순 이후 미 국무성의 신탁통치 구상을 파악한 후 미국 정부에 대하여 신탁통치를 포기하든지 ‘우회’할 것을 강조하였다. 미군정은 국무성의 방침과는 반대로 10월 20일의 빈센트 발언²⁾ 이후 한민당 인사들 및 김구 등을 동원하여 신탁통치 반대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특히 송진우와 한민당은 그들의 선전도구들을 통해 여러 점령정책을 전달 내지 운색하였다(커밍스, 1986, 285쪽). 동아일보는 그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미군정은 표면적으로는 모스크바 협정의 내용을 설명했으나 내면적으로는 우파들의 반탁운동을 조장하였다. 이 운동은 불과 며칠 사이에 신탁통치에 관하여 소련만을 비난하기에 이르렀다(커밍스, 1986, 287쪽).

4. 동아일보의 왜곡보도와 그 영향

1) 해방 직후의 상황

일본의 항복과 조선의 해방은 모든 조선 사람들이 반기고 감격하는 건 아니었다.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건설적인 걱정”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새 질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反)혁명’이란 단어가 뜻하는 모든 것을 지지한 사람들도 있었다(커밍스, 1986, 107쪽). 전자의 부류에 해당하는 여운형 주도의 건국준비위원회는 일사천리로 조직을 확대해갔다. 건국의 지부가 8월 말이 되면 남북을 통틀어 145개가 조직되었다.

해방 이후 민족의 시대적 소명은 통일된 독립국가의 건설이었다.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민족의 독립국가 건설에서 민중의 지배적인 여망은 토지개혁과 친일파 처단이었다. 식민지배에서 고통을 받았던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일신의 영달을 누린 친일파를 처리해야 하는 과제가 자연스럽게 부상한 것이다. 이 두 과제는 연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좌절되어 갔다. 지주이기도 한 친일파들이 미군정과 밀착된 상태에서 토지개혁에 반대하고 친일파 처리의 과제도 무산시킨 것이다. 그러나 해방 직후의 분위기는 진보진영이 주도하였다.

2) 미 국무성에서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 구상을 주도했던 빈센트 국장은 1945년 10월 20일, 미국의 정책은 한국을 위한 신탁통치 구상에 있다고 발표했다.

민족주의 우파진영의 지도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제에 부일 협력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민족주의의 좌파 내지는 진보진영 지도자들이 정국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중들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정구 교수에 따르면, 미 국무성이 1945년 4월 작성한 ‘조선정세 분석보고서’에는 이미 조선은 90%에 달하는 주인 없는 재산(적산) 때문에 사회주의가 되기에 용이한 경제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다(김호중, 2005년). 그리고 미군정이 1946년 7월 서울 지역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어떤 경제체제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본주의 14%,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일부 자료엔 7%)라는 결과가 나왔다(동아일보, 2005년 10월 3일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진보적인 이념 및 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던 토지개혁과 친일파 청산 작업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형성된 남한 민중의 선택이라는 측면도 있다. 1945년 당시 한국인들이 보았던 대로 한국을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커밍스는, “여러 해 동안 일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기대를 걸게 되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커밍스가 본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묘사다.

“당시 민족주의 진영은 많은 지도자들의 부일협력으로 인하여 심히 약화되거나 손상을 입고 있었다. 8월 15일에 공산주의자들이 도피처나 형무소로부터 나왔을 때 그들은 문제삼을 수 없는 애국적 증명을 지니고 있었다. 해방된 한국에서는 정치적 정통성의 주된 시험기준이 일본치하의 경력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이 시험에 통과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국의 많은 옛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이 기준에 미달이었으므로 9월 초까지는 비활동적이었던 것이다”(커밍스, 1986, 121쪽).

이 같은 분위기에서 신문 발행도 진보진영이 우세하게 앞서나갔다. 최준 교수는, 좌익진영의 압도적인 진출로 말미암아 건국준비위원회가 펴뜨린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좌익색채는 신문계에도 맹렬한 기세로 번져나갔다고 묘사했다. 코리아 타임즈(9월 5일 창간), 민중일보(9월 22일), 동신일보(10월 4일), 신조선보(10월 5일), 대공일보(11월 3일), 대동신문(11월 25일)을 빼놓고는 거의가 좌익적 경향의 논조를 펴서 일찍이 없었던 좌우대립의 논진이 전개되었으며, 이리하여 해방후의 언론계 역시 공산좌익의 세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기반을 마련하고 나왔다는 것이다(최준, 위의 책, 340쪽). 조선인민보(9월 8일), 자유신문(10월 5일), 해방일보(10월 9일), 중앙신문(11월 1일) 등이 대표적이다. 진보적인 신문들은 인쇄시설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발행부수에서 압도적이었다.

이 분위기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미군정의 도움을 받아 복간을 추진하였다. 두 신문은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간되면서 인쇄시설을 모두 매각 처분하였기 때문에 인쇄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친일파로 인식된 신문들이 진보진영이 장악하고 있는 인쇄시설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조선일보는 미군정과 접촉한 결과 매일신보에서 제호를 바꾼 서울신문의 시설을 이용하여 1945년 11월 23일 타블로이드 2개 면의 속간호를 냈으며, 동아일보는 미군정의 양해를 얻어 경성일보의 시설을 이용하여 1945년 12월 1일 속간호를 낼 수 있었다(김민환, 2009, 329~330쪽).

진보진영은 여운형 등의 주도로 건준을 구성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는 등 발빠르게 정국을 주도해갔으나 9월 8일 미군이 진주한 이후로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분위기에 압도되어 잠복해 있던 친일파 출신 민족주의 우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미군정은 이들을 후원하였으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속간도 그 맥락이다. 친일파 지주들이 중심이 된 민족주의 우파들은 한민당을 창당하

였으며, 동아일보는 한민당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2) 동아일보의 신탁통치 왜곡 보도

중경에 있던 임시정부 인사들은 카이로선언의 내용이 알려진 당시에 이미 ‘적절한 시기에’(in due course)라는 표현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독립을 보장하기는 하지만 즉시 해줄 수 없다는 의의를 바로 간파했다는 것이다(김지동, 2010b).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보에 어두워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했고, 독립을 보장한다는 부분에만 기대를 키웠다. 그리고 신탁통치에 대한 보도가 나왔을 때 즉시 독립을 기대하는 민중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던 것이다.

동아일보는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공식 결정이 발표되기 전인 1945년 12월 27일 1면 머리기사로 <外相會議에 論議 朝鮮獨立問題 / 蘇聯은 信託統治 主張 / 蘇聯의 口實은 38線 分割 占領 / 米國은 即時獨立 主張>을 실었다. ‘워싱턴 25일發 合同至急報’라고 돼 있는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3국 외상회담을 계기로 조선독립 문제가 표면화하지 않는가 하는 관측이 농후하여 가고 있다. 즉 번즈 미 국무장관은 출발 당시에 소련의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여 즉시 독립을 주장하도록 훈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3국간에 어떠한 협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불명하나, 미국의 태도는 카이로 선언에 의하여 조선은 국민투표로써 그 정부의 형태를 결정할 것을 약속한 점에 있는데, 소련은 남북 양 지역을 일괄한 일국 신탁통치를 주장하여 38도선에 의한 분할이 계속되는 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미국이 제의한 신탁통치안을 소련이 제의한 것이라고 왜곡하였다. 이 기사는 명백한 오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의 의도가 개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견해도 있다(大沼久夫, 정일준, 165쪽). 오보(誤報)가 아닌 허보(虛報)요 왜곡보도인 것이다. ‘관측이 농후’, ‘받았다고 하는데’, ‘불명하나’ 등의 표현에서 보듯이 추측으로 일관하며 번즈 장관이 소련의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여 즉시 독립을 주장하도록 훈령을 받았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탁통치 구상은 미국(루즈벨트)의 것이었으며, 소련(스탈린)은 미국의 구상에 적극적 동의를 하지 않는 가운데 즉시 독립을 기본으로 하여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세우고 최소한의 후견(Oπkα) 기간을 두는 정도로 하는 입장이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의 출처에 대해 ‘워싱턴 25일發 合同至急報’라고 해놓았다.³⁾ 우선 보도시점의 의문을 갖게 한다. 모스크바에서 3상회의의 결정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일시는 12월 28일 오후, 서울 시간으로는 28일 오후 6시였다. 적어도 2일 전에 기사를 받아 인쇄를 한 셈이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결정내용을 29일야에 입수했다.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정용욱은 기사의 출처가 워싱턴이 아닌 일본이라고 판단한다(정용욱, 2003, 58쪽). 구체적으로 미군정과 맥아더 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관련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엄격한 검열을 실시하던 때에 나온 “이 기사가 국내의 통신사와 신문사를 통해 그렇게 신속하게 확산된 것은 미군정의 방조와 묵인

3) 합동통신의 전신은 일제 식민지 시기 동맹통신이며, 미군정은 동맹통신을 11월 초에 접수하여 국제통신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했다. 그러나 경영난으로 연합통신과 통합하여 합동통신이 되었다.

이상으로 깊이 개입하였으리라는 추측에 무게를 더 한다”는 것이다(정용욱, 2003, 65쪽). 신탁통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민중의 분노가 고조되는 것을 보면서 “사태의 전개를 주시하던 하지는 삼상회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자 미국이 신탁통치를 제안했다는 사실이 가져올 정치적 곤경을 예상하고, 미국에 쏟아질 비난의 방향을 소련으로 돌리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다(정용욱, 66쪽).

실제로 맥아더도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 맥아더는 “남한에서 미국은 분할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 남한에는 일체의 미국적인 것에 대한 분노가 증대되고” 있고, 친일파,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에 친미라는 용어가 추가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신탁통치가 부과되는 경우, 한국인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김국태, 1984, 169~171쪽). “육군 대장 더글라스 맥아더가 합동참모부에”라는 제목의 이 서한은 12월16일 작성된 것이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맥아더 사령부와 미군정이 여론조작에 나섰을 것이라는 추측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주한 정치고문 사무소 요원이던 에몬스(Arthur B. Emmons) 3세가 1945년 12월 30일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는, 신문의 “선동의 화살은 최장 5년 기한의 신탁통치 전망의 주변에 집중”되어 “한국인들은 신탁통치안을 그 최장 기한(5년)을 포괄하는 것으로 된 하나의 ‘기정사실’로 해석함으로써 민중의 분노가 소련군과 한국인 정치지도자들에게 향해짐으로써 잘 모르는 한국인들이 군사보호 혹은 독재의 형태로 해석하던 신탁통치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미국은 벗어나” 있게 됐다고 보고하였다(김국태, 1984, 178~179쪽). 불과 3~4일 사이에 동아일보를 비롯한 우익신문들의 왜곡보도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다. 이는 미군정 당국과 미국이 의도한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동아일보 기사의 출처로 유일하게 지목할 수 있는 매체는 워싱턴이 아닌 태평양 방면 미군들을 위해 일간으로 발행하던 태평양성조기(*Pacific Stars and Stripes*) 1945년 12월 27일자였고, 필자는 UP통신의 랄프 하이젠(Ralph Heinzen) 기자였다(정용욱, 2003, 59쪽). 랄프 하이젠의 기사는 미국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는데,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날조 전문가’로 통했으며 ‘상상력으로 벽면 가득 기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정용욱, 2003, 59~63쪽). 그런데 문제는 일본 도쿄에서 발행된 태평양성조기와 동아일보가 같은 날 기사를 내보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동아일보 기사는 그 전에 같은 내용의 기사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동아일보는 ‘워싱턴 25일발 합동’이라고 돼 있다. 미국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은 점과 어느 통신사로부터 수신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은 점이 의문을 갖게 한다. 결국 정용욱은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고 활용할 능력을 갖춘 조직으로 미군정이나 도쿄의 맥아더 사령부를 꼽았다. “즉 이 기사의 작성과 배포에는 미 육군 극동군사령부와 서울의 주한 미군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는 추론이다(정용욱, 2003, 65쪽). 결국 동아일보는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기사를 대서특필하면서 지속적으로 왜곡보도를 내보냈던 셈이다.

동아일보는 이와 같이 그 출처가 의문스러운 왜곡보도로써 반탁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3상회의의 결정이 알려지기도 전에 한국민주당은 이미 신탁통치반대를 결의한 바 있다. 25일의 긴급간사회의에서 연합국측의 조선신탁통치를 절대 반대한다고 결정한 것이다(자유신문, 1945년 12월 26일자). 사실상 한민당의 기관지인 동아일보는 한민당의 결정에 따라 추측보도로써 반탁의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군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1945년 12월 27일 이후 1947년 12월 27일까지 2년 동안 모두 238개의 반탁 기사를 실었다. 1개를 제외하고 모두 반탁을 선동하는 왜곡보도들이었다. 하나의 예외는 12월 29일 1면에 실은 <외상회의결정전문>이었다. 이 결정문의

조선관련 조항은 3상회의의 결정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즉,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선임시민주정부 설립을 원조한다, 최고 5년의 4개국 신탁통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조선임시정부를 설립케 하여 조선의 독립을 준비한다 등 위에서 언급한 그대로였다. 골자는 장차 조선의 독립을 돕기 위해 신탁통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임시민주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신탁통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다. 목표는 조선의 독립이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임시민주정부의 구성과 독립 준비는 누락시키고 신탁통치만을 강조함으로써 반탁운동에 불을 붙인 것이다.

동아일보는 나아가서 반탁의 민족주의적 측면보다는 그 반공 이데올로기로서의 유효성의 측면을 의식적으로 이용했다(김민환, 2001, 71쪽). 동아일보는 아직 3상회의 종결 소식도 접하기 전인 12월 28일자에 <소련의 조선신탁 주장과 각 방면의 반대봉화>를 1면 톱으로 배치하고, 사설 <민족적 모독-신탁 운운에 대하여 소련에 경고>에서는 “회의로부터 발표된 정식 공보가 아니매 그 진부는 속단키 어려우며 따라서 비판의 정확도 기하기 어려운 터이나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어찌할 것인가?”라며 “대체로 미국은 카이로선언을 준수하여 국민투표에 의한 즉시독립을 승인하지는 것이며, 소련은 38선의 존속으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니 일국의 신탁관리를 하지는 것이라 한다”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로써 반소·반공의식을 조장하였다. 이 사설은 결론으로 “아직 진상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미후의 진전을 주시하는 동시에 이 이상의 비판을 보류하거나 불의와 부정에 대하여는 ‘피로써 항쟁’한다는 결연한 결의를 일언하여 우선 소련의 맹성(猛省)을 경고하여 두려는 것이다.”라고 해 신중한 듯하면서도 소련을 지목했다(동아일보, 1945년 12월 28일자). 객관적 사실의 확인과는 관계없이 결론을 정해놓고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아일보는 12월 29일자 2면에 <외상회의 결정문>을 2단 크기로 실었다. 그러나 1면 톱 기사는 <신탁통치제과연 실시 / 외신이 전하는 모스크바회의내용 / 4국통치위원회 금후5개년계속>이라는 제목에 “조선에 미, 소, 영, 중의 4개국의 신탁통치위원회가 설치된다. 동위원회에는 5년 후에는 조선이 독립할 수 있다는 관측하에 5년이라는 연한을 부(附)한다. 미, 소 양국은 남북조선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지역 군정당국의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보도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다. 역시 임시민주정부 설립 내용은 빼고 신탁통치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5년이라는 기한도 ‘최대’치를 잡은 것이고, 나중에 빈센트가 번즈 국무장관의 성명을 인용했듯이 신탁통치가 폐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커밍스, 1986, 295쪽).⁴⁾ 그러나 동아일보는 실제 결정문은 무시하고 5년의 신탁통치를 부동의 결정으로 강조하며 반탁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날인 12월 30일에는 4개 면을 할애했다. <託治反對! 獨立戰取! 파당을 초월한 3천만 총의>(1면 톱), <2주일내에 회합 미소양군 북조선에서, 신탁통치관리에 대해>(1면), <3천만혈탄에 점화한 신탁관리>(2면 톱), <40여단 대동단결 일대혈투를 전개>(3면 톱), <3천만 동포에게 고함 / 김구주석 방송요지 / 조국위환 百死不惜>(4면 톱) 등 전 지면을 도배했다(동아일보, 1945년 12월30일자). 이와 같은 내용의 선동적인 기사들이 연일 이어진다.

4) 이 부분 커밍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미국이 모스크바에서 행한 신탁통치의 주장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갔는가는 1946년 1월 19일의 NBC 방송 토론에서 John Carter Vincent가 한 발언에서 나타난다. 한국에 관한 모스크바 협정을 요약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빈센트는 신탁통치에 관한 언급을 빼놓았다. 사회자가 신탁통치 문제를 묻자 그는 신탁통치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Byrnes의 성명을 인용하면서 신탁통치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는 하나의 절차’라고 표현했다.”

해를 넘긴 1월 3일에는 12월 30일의 톱 기사와 같은 제목(託治反對! 獨立戰取! 과당을 초월한 3천만 총의)이 역시 톱기사로 배치되었다. 두 기사 공히 임정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신탁통치에 저항하는 내용이다. 이날 사설 <통일 저해의 원인>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서 “탁치를 가로놓고 또다시 한말의 당화(黨禍)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동아일보 1946년 1월 3일자). 1월 5일에는 <탁치지지 독립부인>을 1면 톱으로 배치하고 사설에서 <자아모독을 擊함/탁치 수락은 노예근성>이라고 선택을 강요하는 등 연일 반탁운동을 선동하였다. 동아일보는 1945년 1월 4일자 기사 <탁치의 불필요를 희망>에서 번즈 장관의 3상회의의 조선문제보고방송 내용을 보도하였다. 12월 27일 첫 보도 이후 3상회의의 결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미국 정부의 입장까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허위보도로써 반탁운동을 지속적으로 선동했던 것이다.

남한에서 모스크바의 결정이 왜곡되면서 반탁운동이 고조되자 스탈린은 1946년 1월 23일 모스크바 주재 해리만 대사를 불러 항의를 했다. 해리만은 이날 상황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커밍스, 1986, 294쪽).

“그는 나에게 한국에서 온 전보를 읽어 주었는데 그곳의 미국 대표자들이 신탁통치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표현된 대중집회가 개최되었으며 한국 신문들은 미국이 아닌 소련만이 신탁통치를 고집하였다고 보도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미 군정의 민정장관 러치(Archer L. Lerch) 장군이 이상과 같은 일에 연관되어 있음을 특별히 지적하였다.”

소련은 1월 25일 타스 통신을 통해 당초 미국측 안과 소련측 안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소련의 임시정부 수립 주장이 반영된 사실 등 3상회의의 최종 결정 내용을 자세히 밝혔다. 그리고 ‘주소 대리대사(케넌 Kennan)가 국무장관에게’라는 서한을 보면, 보도와 관련해서도 “한국 신문들은 한국문제에 관한 모스크바의 미·영·소 3국외상 회의의 결정과 관련하여 왜곡된 보도를 전하고 있다”면서 “분명히 한국신문들은 잘못되고 파렴치한 정보의 희생물이 되고 만 것이다.”라고 적시하였다(김국태, 1984, 201~203쪽). 그러나 동아일보는 1월 29일자에 <蘇聯代表스將軍發表한 타스通信報道內容>을 2단으로 게재하면서 바로 위에 3단으로 원세훈⁵⁾의 기고문 <託治提議는 누가 먼저 했든지 自主獨立과는 背致 / 타스 通信을 읽고>를 배열해 희석시켰다. 원세훈은 이 글에서 스티코프 대장의 신문기자회견에서 “託治를 美國側이 提議하였고, 第1次5個年으로 不充分한 때는 第2次5個年까지 하지는 데 대하여 蘇聯은 最高5個年으로 하지는 代案으로써 결정”했다는 유래를 알게 되었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蘇聯案이 美國案과 오십보, 백보란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고 호도하였다. 한 달 동안 왜곡된 보도에 의해 조성된 혼란의 진원을 덮어버린 것이다. 원세훈은 이어서 “託治案을 그 누가 提議決定하였는지 물어볼 餘暇도 없이 絶對反對할 뿐이다. 蘇聯에서 提議하였는지 美國에서 提議하였는지 그 眞相의 糾明은 他日로 미루고 于先 託治만을 먼저 反對하는 것이 곧 우리 3천만의 民族的 決心이다.”라고 하여 역시 실체가 불분명한 신탁통치에 초점을 맞춰 반탁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동아일보, 1946년 1월 29일자).

동아일보는 이에 앞서 1월 26일자 1면 사설 <根據없는 “타스” 報道>에서, 남한에서 미군정 당국의 방조하에 소련을 중상하면서 대대적으로 반탁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한 타스통신 보도에

5) 원세훈은 당시 한민당 총무였으며, 1946년 좌우합작을 통한 민족통일국가 건설과 토지개혁을 주장하면서 한민당을 탈당하였다.

대해 “우방국으로서의 조선이 필요하다면 무단적 탄압이나 신탁통치나 원산, 청진 등을 요구치 말고 오랫동안 노예적 착취와 탄압에 신음한 조선민족에게 우의와 애정을 표시하여주기 바란다”면서 “우리는 결코 친미 반소나 반미 친소를 원함이 아니며 친미 친소 친중의 국제적 협조를 염원하는 까닭에 우리의 자주적 입장을 요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라고 하여 반탁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반소의 표출을 은폐하였다(동아일보, 1946년 1월 26일자). 특히 이 사설은 “구랍 29일 하지 중장은 각당 당수와 신문기자를 초청하여 미국무부에서 온 공문을 발표하여 3상회의의 결정이 결코 조선을 속박함이 아니라 자주독립을 원조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설명하여 극력양해를 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민족적 자존심의 충동으로서 일어나는 전민족적 반탁열에는 하지 장군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며 미군정을 두둔하였다. 3상회의의 결정 내용이 이미 상세히 전달되었음에도 신탁통치에 초점을 맞춰 왜곡하면서 반탁운동을 선동하였으며, 그것을 순수한 민족적 자존심의 발로로 둘러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반탁운동을 반소·반공과 연계시키는 보도도 계속되었다.

동아일보는 이처럼 모스크바 3상회의의 정확한 내용이 전해진 이후에도 줄곧 사실을 왜곡하며 반탁·반소운동에 명운을 걸다시피 했다. 나아가서 신탁통치 지지자를 매국노로 매도하면서 반탁운동을 주도하는 친일파를 애국자로 치환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동아일보는 1946년 8월 29일 국치일에 낸 사설 <국치일에 題함>은 자신의 과거 친일행적을 감추고 친일파를 신탁통치 지지자들과 묶어 반족적 분자로 매도하는 가치의 전도를 드러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릇 자력자존, 자주자율을 근본으로 한 자아광복의 이념과 배치되는 일체의 사태와 함께 이 날을 말살하자. 일정(日政)과 부동(附同)하여 동족을 욕되게 하고 괴롭게 하던 악질의 친일 반역자 무리, 타력에 의거하여 잔재를 묻은 채 현상에 구안(苟安)하려는 배와 사대자 계층, 일시의 혼란을 악용하여 야욕을 꿈꾸는 독립 방해자 도당 등 이 모든 반족적 분자들과 함께 이 날을 우리의 기억과 환경에서 완전히 청소하자.”

동아일보는 “일정(日政)과 부동(附同)하여 동족을 욕되게 하고 괴롭게 하던 악질의 친일 반역자 무리”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 좌파를 반민족 행위자로 몰아세우는 이런 이념적 전치는 이후 집요하게 지속되었다(김민환, 2001, 72쪽). 동아일보는 이런 식으로 친일파, 특히 한민당을 대변하여 모스크바 3상협정의 내용을 신탁통치안으로 왜곡하고, 반탁운동에 앞장서서 ‘찬탁=매국=친소’, ‘반탁=애국=반공’이라는, 사실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내보냈던 것이다(박태균, 1993, 190쪽). 동아일보는 이처럼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12월 27일의 허위보도 내용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실체도 없는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선동했다. 12월 27일의 기사를 오보가 아닌 의도적인 왜곡보도로 용인할 수 있는 증거다.

3) 민족사의 굴절

해방 직후 친일파들은 민족을 배반하고 부역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대신에 미군정에 협조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재기를 모색했다.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 친일파들이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미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의 극우반공 정책에 앞장섰던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친일 반민족행위를 은폐하고, 자신들의 타도를 외치고 있는

민족해방운동세력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박태균, 1993, 191쪽). 친일파들은 특히 모스크바 3상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의 전파에 주력하였다. 한민당과 이승만은 소련이 신탁통치안을 제시하였다는 왜곡보도를 근거로 하여 반탁운동을 반공·반소운동으로 몰아갔다(한국역사연구회, 1992, 366쪽). 즉 미국이 주장한 신탁통치안을 소련이 주장한 것으로 왜곡보도하면서 ‘빠른 시일 내 통일임시정부의 수립’을 골자로 하는 ‘모스크바 3상 결정’에 대한 지지를 ‘찬탁’, ‘친소’, ‘매국’으로 몰아붙였으며, 반탁운동을 반공운동과 연계하여 격렬하게 전개했던 것이다(박태균, 1993, 191~192쪽). 친일파들의 이와 같은 반공 이데올로기는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의식으로 자리를 잡아갔으며, 단독정부 수립 이후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하며 기득권을 행사해온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친일파들에게 예기치 못한 해방은 재앙이었다. 독립국가 건설 과정에서 그들의 설 자리가 없음을 물론이고 단죄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미군이 들어와 군정을 실시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커밍스의 표현대로 ‘정치적 정통성의 주된 시험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이들은 8월 말에 이르러 미군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해지면서 건준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 조직을 갖추고 활동할 체비를 했던 것이다(커밍스, 1986, 123쪽). 그 조직이란 한민당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미군은 친일파로 분류될 수 있는 관료와 경찰에 대해 현직에 충실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일제의 통치기구를 그대로 활용했다. 그 결과 친일파들은 일제 때 저지른 반민족행위를 다시 저지르며 독립국가 건설을 방해하고, 이승만과 한민당의 단정운동을 떠받쳐주는 정치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다(서중석, 1993, 40쪽). 이들은 국민 대중에게 극우반공이데올로기를 제시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였다. 극우반공 이데올로기는 “친일파였던, 테러를 했던, 매관매직·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자건, 타락한 생활을 하던 자건 모든 죄가 면죄되는 현대판 면죄부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서중석, 1993, 41쪽).

친일파가 극우반공의 입장을 취하기만 하면 친일의 과거는 지워지고 애국자로 둔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반탁운동이었다. “단정운동이 극우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되고, 그때까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었던 친일파들이 친일파 처단을 주장하는 자들을 적극 공격하여 자신을 ‘애국자’로 둔갑시키고 반대세력을 ‘비국민’, ‘매국노’로 몰아칠 수 있게 된 것”이 반탁운동이라는 것이다(서중석, 1993, 42쪽).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의가 조선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반탁문제에 대한 12월 하순의 국내 신문보도가 사실과 얼마나 엄청나게 다르고 왜곡되었으며 틀린 것이 많았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 아래 민족지주를 위해서 결연히 싸워야 할 시기에 감정적이고 특수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격렬한 시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친일파들은 반탁이 갖는 정치적 효용만을 중요시하였다. 반탁이 반공 이데올로기처럼 면죄부 역할을 했던 것이다(서중석, 1993, 43~44쪽). 반탁운동은 1945년 12월 24~26일 사이에는 반소반공운동으로 시작되어 27~28일경에는 반소반공적인 반탁이 주조가 되고, 29~31일에는 중경임정 추대를 앞세운 반소반공 반탁운동으로, 그 이후에는 반소반공의 정치효용성이 특별히 부각된 운동이었다. 반탁운동은 해방 이후 극우반공운동의 기점을 이루었고, 친일파를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무기로 기능하였다(서중석, 1993, 45쪽). 반소반공적인 반탁이 주조로 된 12월 27일은 바로 동아일보가 왜곡보도를 낸 날이다.

동아일보는 속간 이후 정파적으로 한민당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여 반공 반탁의 강경한 논조를 폈으며, 그 후 미국의 분단정책에 편승하여 단정(單政) 수립의 방향으로 여론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김민환, 2009, 331쪽). 한민당은 뚜렷한 정치노선을 갖고 결성된 게 아니라 친일과 지주, 자본가들이 모여 건준이 주도한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한 반대를 목표로 하여 결성된 정당이다. 그리고 미군정 당국은 반공을 표방하며 군정에 협조적인 한민당을 파트너로 선택했으며, 한민당은 이를 배경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이승만과 함께 단정 수립을 주도하였다(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1, 73~74쪽). 미군정은 당시 우세한 민중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던 좌파 민족주의자들과 중도파 및 임정계를 포함하는 우파 민족주의세력을 배제하면서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세력과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적 민족주의 세력의 극우분파와 동맹을 형성함으로써 반공에 기초한 국가주의로 이념적 헤게모니를 구축할 수 있었다(최장집/이성형, 1991, 214쪽). 미군정이 이렇게 이승만과 한민당 등 냉전체제에 편승한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여건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우익신문들이 반탁논쟁에서 잡은 대세반전의 호기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여론을 반공과 단독정부노선으로 몰아가는데 주력했다(김해식, 1991, 265~266쪽). 한민당의 핵심인사인 김성수 송진우가 동아일보의 소유주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민당의 입장이 곧 동아일보의 논조로 직결되는 구조인 것이다. 동아일보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한민당은 반탁의 깃발 뒤에서 친일파라는 비난을 피했고, 자신들의 정치적 복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면에선 가장 큰 수혜자였다”(정용욱, 2003, 68쪽).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을 번역했던 김자동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⁶⁾

- 6) 빨치산 출신의 비전향 장기수인 임방규씨는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연재하고 있는 자서전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임방규, 일제에서 미제로-신탁통치의 비밀, <통일뉴스> 2010년 8월20일자: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420>

“우리 민족에게 통치능력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며 이 땅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야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방 직후에 우리민족은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질서를 잡아가고 있지 않았던가. 이는 우리 민족에게 통치능력이 탁월함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미제는 40년 신탁통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20년 신탁통치를 주장했고 그것도 안 되자 다시 10년 신탁통치를 고집했지만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5개년 후건제로 결정을 보았다. 이에 미국은 뜻대로 되지 않자 모스크바 삼상결정을 5개년 후건제가 아닌, 5년 신탁통치로 왜곡 보도하면서 우익분자들을 통해 모스크바 삼상결정을 반대하도록 종용했다. 전체 언론기관은 대서특필로 신탁통치 반대 논설을 실었다.

“왜 또다시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하느냐!”

분노한 민중은 거리로 뛰어나갔다. 신탁통치 반대 구호를 외치며 플래카드를 든 시위군중이 큰길에 메웠다. 군중 시위는 연일 계속되었다. 이는 외세의 지배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조선인민의 반외세 투쟁의 일환이었다.

며칠 후, 진보진영은 모스크바 삼상결정 원문을 입수하여 그것을 각종 보도기관을 통해서 해설 소개했다. 신탁통치가 아니라 5개년 후건제라는 점, 기간이 오 년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각 당, 단체 대표들에 의해서 구성될 임시정부가 자기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언제든지 협의하여 철수하며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그제야 비로소 미제와 그 주구들이 외세의 지배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애국적 열정을 그들 식민지 정책에 역이용하고 있음을 간파하게 되었고 모스크바 삼상결정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각 지역에서 군중집회를 갖고 모스크바 삼상결정을 지지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했다.

당시 좌우 어느 쪽이 애국적이며 정당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오늘의 역사는 준엄하게 답변하고 있다. 모스크바 삼상결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전 민족이 단결하여 전진했다면 5년 이내에 외세의 지배가 없는 독립국가를 건설했을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외국 군대가 서울 한복판에 주둔하고 있는 민족적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약소국가 영토 내에, 특히 수도에, 강대국 군대가 주둔하는 조건하에서 독립을 유지한 약소국가가 인류 역사상 어느 곳에 있었던가. 그때 삼상결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면, 분단으로 우리민족이 당한 극심한 고통과 민족적 손실은 없었을 것이다.”

“그때 신탁통치 반대론자들이 지지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합의점을 찾으려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친일경력으로 그동안 ‘반민족적’이란 낙인에 수세로 몰렸던 일부 세력은 이 기회를 이용해 좌익을 ‘반민족적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호기로 삼기도 했다. 만약 우리의 영도자들이 그때 오스트리아의 좌우 정치인같이 미·소가 다 용납할 수 있는 타협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김자동, 2010d)

5. 결론

남한 전역에서는 여운형·안재홍 등의 주도로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세를 배제한 독립국가 건설을 신속하게 준비해나갔다. 민중들의 호응도 압도적이었다. 토지 재분배와 적산 처리 등 민중의 기대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이 9월 9일 서울에 진주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미군은 <조선인민에게 고함>이란 제목의 미국동사령부 포고1호의 “미국 태평양방면 육군총사령관(맥아더)으로서 … 본관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했다”라는 내용에서 보듯이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이 포고문에서 밝혔듯이 조선인 관리들의 직위를 보장했으며, 곧 이어 건준을 부정하면서 친일파들과 손을 잡았다. 미국은 유럽전선에서 독일과 대적하고 있는 소련과 연합국을 형성했지만 극동지역에선 사정이 다소 달랐다. 일본을 상대하기 위해 소련을 필요로 했지만 전후의 식민지 재분할을 염두에 두고 일정하게 견제를 했다. 때마침 개발에 성공한 원자폭탄을 서둘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까닭도 소련의 조선에 대한 지분을 배제 내지는 축소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미군정은 답습했다. 신탁통치 구상을 실천에 옮긴 국무성과는 달리 남한의 미군정 당국은 반탁을 조장했던 것이다. 한민당은 미군정과 보조를 같이 했으며, 한민당의 정파적 입장을 대변하는 정론지(政論紙)로서 동아일보는 앞장서서 집요하게 반탁을 선동했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이 신탁통치가 주가 아닌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에 있었음에도 외신을 빙자한 허위·추측보도로 반탁의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그 내용이 소상히 알려진 다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희석시키며 신탁통치에 방점을 찍고 반탁운동을 지속적으로 선동하였다.

그 결과 반탁=반소=반공=애국, 친탁=친소=용공=매국의 공식이 성립되었다. 친일파들이 애국자로 둔갑하고, 반대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신탁통치를 수용하여 민주정부 수립을 추진한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는 매국노로 매도되었다. 토지개혁과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실종되었다. 토지개혁과 친일파 청산을 철저히 단행한 북한에 대해 호의적으로 인식하던 민중들도 반탁선동에 매몰되어 현안의 과제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 분위기에서 친일파들은 미군정의 도움을 받아 단독정부 수립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친일파들이 한국사회의 주류가 되어 새 역사의 출발을 왜곡시켜놓은 것이다. 나찌독일에 협력했던 지식인들을 철저히 숙청함으로써 새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놓은 프랑스와 대비되는 대목이다(주섭일, 1999). 그 잘못된 출발에서 비롯된 절곡은 오늘날까지도 뿌리 깊게 남아 있다. 동아일보는 아직까지도 정론지(政論紙)로서의 성격을 벗어 나지 않은 채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고 특정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김민환 (2001). 『미군정기 신문의 사회사상』. 나남출판.
- 김민환 (2009). 『한국언론사』. 나남출판.
- 김자동 (2010a). 길을 찾아서—임정의 품안에서. 한겨레신문, 2010년 3월16일자.
- 김자동 (2010b). 길을 찾아서—임정의 품안에서. 한겨레신문, 2010년 3월17일자.
- 김자동 (2010c). 길을 찾아서—임정의 품안에서. 한겨레신문, 2010년 4월12일자.
- 김자동 (2010d). 길을 찾아서—임정의 품안에서. 한겨레신문, 2010년 4월29일자.
- 김해식 (1991). 한국언론과 이데올로기.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녹두.
- 김호중 (2005). 동아일보 자료, 질문부터 틀린 여론조사. 오마이뉴스, 2005년 10월 12일자.
- 김국태 옮김/미국무성 비밀외교문서(1984). 『해방3년과 미국 I』, 돌베개.
- 박명립 (1989). 해방, 분단, 한국전쟁의 총체적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 6』. 한길사.
- 박태균 (1993). 해방후 친일파의 단정·반공운동의 전개.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1993 겨울.
- 서중석 (1993). 친일파의 역사적 존재양태와 극우반공독재. 『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 역사문제연구소.
- 윤대원 (1990).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 한길사, 33.
- 이정복·윤종일 (1994) 편저. 『사료 한국사』. 신서원.
- 정용욱 (2003). 『존 하지와 미군 점령통치 3년』. 중심.
- 정일준 (1988). 解放 직후 分斷國家 형성 과정에 대한 一考察. 한국사회사연구회, 『해방 직후의 민족 문제와 사회 운동』. 문학과지성사.
- 주섭일 (1999). 『프랑스의 대숙청』. 중심.
- 최상룡 (1988).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 나남.
- 최장집/이성형 (1991). 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녹두.
- 최 준 (1960). 『한국신문사』. 일조각.
- 재미한족련합위원회 편 (1948). 『해방조선』.
-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1), 『한국현대사 1』. 풀빛.
- 大沼久夫. 朝鮮の解放. 分斷 國內勢力 : 信託統治問題を中心として. 정일준(위 논문), 한국역사연구회 (1992).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 리처드 E 라우터백 저, 국제신문사 출판부 역 (1948). 『한국미군정사』.
- Bruce Cum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 War*. 김자동 옮김 (1986).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투고일자 : 2010.8.31, 수정일자 : 2010.10.12, 게재확정일자 : 2010.10.18)

ABSTRACT

A Study on Trusteeship Reports of Dong-a Ilbo

Dong-Min Kim*

Dong-a Ilbo tried to assume leadership of opinion in preceding the movement against the trusteeship as a mouthpiece for the Han-Min Party. Dong-a Ilbo was to try to promote the atmosphere of anti-trusteeship=anti-communism=anti-Soviet Union, distorting the decision of a conference of three foreign affairs ministers in Moscow. It was not an incorrect report, but the false report.

As a result, the formula of an anti-trusteeship=anti-Soviet Union=anti-communism=patriotism, and a pro-trusteeship=pro-Soviet Union=pro-Communism=traitor was formed. And the important problems of land reform and pro-Japanese' clearance were missing.

Historically, political newspapers had appeared in the periods of very important political change. Political newspapers played a role as mouthpiece for political party or group. Dong-a Ilbo was such a political newspaper. It was that Dong-a Ilbo tried to change the social atmosphere in preceding the movement against the trusteeship as a mouthpiece for the Han-Min Party. And history was distorted.

Keywords: Trusteeship, Dong-a Ilbo, Distorted report, Distorted history

* Lecturer Dep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DONG-A University